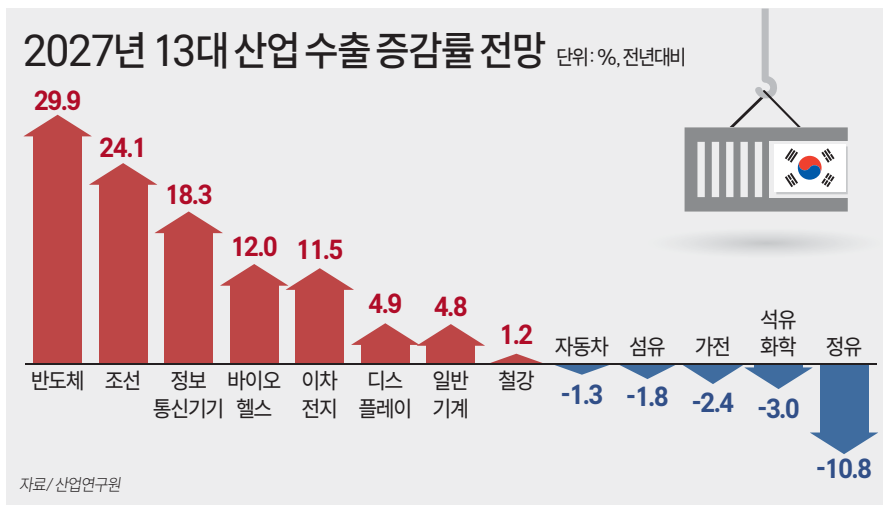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1.1조弗 전망… '반도체 쏠림' 뚜렷

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산업 전망'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3.5% 예상
상반기 고성장·하반기 소폭감소 흐름



자료/ 산업연구원

내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의 수출만으로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요와 첨단 설비투자가 맞물려 내년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회복세와 내수 반등은 더뎌 산업 간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7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1조 1473억 달러로 올해 전망치보다 1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 규모만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떠받치면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3.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통관 기준 전체 수출은 올해보다 14.1% 늘어난 1조 3202억 달러, 수입은 11.0% 증가한 8643억 달러로 예측됐고,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3778억 달러)를 넘어선 45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생산능력 확충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간 부진했던 건설투자 역시 비주거용 건축 수요와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1.8%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반면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는 2.3% 증가에 그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와 건설의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비ICT 업종에서 속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자산시장 변동성 역시 내년 민간소비와 실질구매력 개선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상반기 고성장(+43.4%) 뒤 하반기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0.5%)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쏠림이 커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총 수출 증가율은 올해 수정치 19.7%에서 내년 1.5%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출 역시 상반기에는 AI 수요 호조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공급 확대와 메모리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29.9%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도 6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3대 주력산업 내부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IT·신산업군 수출은 2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29.9%)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8.3%), 바이오헬스(12.0%), 이차전지(11.5%), 디스플레이(4.9%) 등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반면 가전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군 수출 증가율은 5.3%로 전망됐다. 조선은 고선가 수주 선박 인도 확대에 힘입어 24.1%, 일반기계는 미국 제조업 투자와 중국의 설비 교체 수요로 4.8% 늘어나지만, 자동차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1.3%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소재산업군은 5.8% 감소가 예상되며 정유(-10.8%), 석유화학(-3.0%), 섬유(-1.8%)가 줄고 철강(1.2%)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황경인 전략산업분석실 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전동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글로벌·내수 시장 모두 영향을 받고 있고,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대산·여수 산단 등 자율적 구조조정 물량 축소 영향이 겹친다"며 "선도 부문인 메모리 반도체 등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전통 주력산업은 고부가 제품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7년에는 반도체 주도의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3.5% 성장이 예상되지만, AI의 역할을 비롯해 구조적 불안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AI 관련 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주요 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면서 AI의 경제 사회적 충격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금지"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약관 심사
금융위에 73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중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큰 불공정 조항 73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34개와 저축은행 약관 516개 등 총 1550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에 해당하는 73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은행 약관 65개 조항(12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8개 조항(5개 유형)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전체 4375개 금융약관 가운데 심사가 먼저 마무리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 시정요청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추상적·포괄적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술적·운영적·경영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서비스 제공을 중단·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포함됐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핵심인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기존 약관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이 해당된다.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서도 사업자 측 해지권은 넓히고 고객의 해지권은 제한한 사례가 지적됐다.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처럼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달리, 비대면 가입·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적금이나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 방문·서면 제출만 허용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보안·전산시스템 관리상 귀책사유나 부정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특별손해·간접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변경·중단이나 6개월 이상 미이체로 인한 자동이체 해지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지 않거나 고객 확인 책임으로 넘긴 조항 역시 시정 대상이다.

이 밖에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지정, 주채무 흠결 시 보증인의 동일 채무 부담, 이중양도·(가)압류 시 직접 대금 지급 요구, 자의적 기한이익 상실, 명의 위·변조 도용 인지 중과실 기준 책임 제한, 법령상 융자 제한 시 일체 이의제기 금지 등 기타 유형도 함께 걸러졌다.

/세종=한용수 기자